

21세기 자본주의 논쟁⁽¹⁾

김 종 석

1. 소득분배 악화는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다

소득분배의 악화를 자본주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위 양극화로 표현되는 소득분배의 악화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범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양극화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분배의 악화를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범세계적인 이 현상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에서 대체로 그 원인이 규명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자본의 국가 간 이전이 원활해진 것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국내적으로 소득격차를 유발한 한 배경이다. 선진국으로부터 중저기술의 전통적 제조업이 낮은 임금을 찾아 개도국으로 이전을 한 결과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와 저임금을 맞게 되었고, 이것이 선진국에서 소득격차가 발생한 중요한 원인이다.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에 이전된 설비와 기술은 후진국 국내적으로 비교적 숙련된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게 함으로써 후진국 내에서도 숙련된 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격차와 고용기회의 격차를 유발하고 소득격차를 유발했다.

범세계적으로 소득격차를 유발한 또 하나의 배경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제조업 분야의 자동화와 경제구조의 지식경제화이다. 이것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1) 본고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16일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에서 발표된 내용의 요약이다.

발생한 현상인데, 어느 사회에서나 학습능력이 높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지식산업화는 머리 좋고 학습능력이 우수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더 높은 소득기회를 창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소득양극화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며,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오히려 경제의 글로벌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하고, 소득격차를 인위적으로 줄이려는 시도보다는 격차의 문제를 빈곤의 문제로 인식하고, 세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이런 글로벌 추세에 적응하고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문제의 본질은 소득격차가 아니라 빈곤의 확산과 대물림이다.

2. 정부가 자원배분을 주도하는 체제가 미래의 경제체제가 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라기보다는 진화하는 소셜 시스템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100년 전 자본주의와 지금의 자본주의가 다르듯이 100년 뒤 자본주의도 지금과 다를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진화할 것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다른 모습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주의는 유연하고 자기 정화기능이 있어, 시간의 시험을 거친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또는 정부가 자원배분을 대체하는 계획경제체제와 같은 대안이 시장경제 자본주의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산 계획경제는 20세기 시간의 시험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3.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사회개혁이나 경제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 등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양보와 호의에 기반 한 타협은 일종의 카르텔로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양보와 타협으로 형성된 균형이 지속가능하려면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협약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자” 또는 “양보하자”는 구호는 따라서 안정적인

균형을 보장할 수 없으며, 결국은 참여자들의 이기적 동기에 의해 붕괴되고 말 것이다.

경제제도는 이념이나 계몽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디자인의 영역이다. 한국 시장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많은 주장과 대안들이 과연 경제주체들의 사적 인센티브와 정보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인지 검증해야 한다. 상생이나 공생 균형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은 참여하는 주체들의 사적유인 동기에 부합하고 균형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어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수반된 각종 정책, 동반성장, 노동분배율 제고, 소득재분배를 위한 증세 등등의 정책들이 시장참여자들의 사적 유인에 부합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못한다는 것은 20세기 마르크스주의 실험을 통해 입증된 바 있다. 좋은 의도일수록 이를 달성하는 수단은 더욱 현실적이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 되어야 한다.

4. 시장의 실패보다 정부의 실패가 더 심각한 문제다

자본주의 논쟁의 핵심은 결국 시장과 정부 기능에 대한 상대적 신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전통적 경제학 교과서에서 가정하고 있는 불완전한 시장과 완벽한 정부를 전제한 비현실적인 경제학 이론의 결과다. 현실에서는 시장도 불완전하지만 정부도 못지않게 불완전한 도구다. 시장실패가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것만큼 정부실패도 구조적이고 보편적이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시장경제의 대안을 모색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시장을 대신하는 정부가 과연 전지전능하고 착한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자본주의를 개혁하자고 하면서 더 고통스러운 정부의 실패로 시장의 실패를 대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장기능과 정부기능은 비교우위 영역이 다르고 상호 보완적이다. 시장기능은 자원배분에 비교우위가 있고, 정부기능은 경제주체들의 유인구조를 형성하는 시스템 디자인 및 관리에 비교우위가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부가 자원배분에 이런 저런 공익적 근거로 개입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치인과 관료에 의한 자원배분을 의미한다. 정치인과 관료가 자원배분에 개입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남용되게 된다. 국가가 자원배분에 개입하는 전통을 가진 구 사회주의 국가에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장만능주의는 비현실적이지만, 정부만능주의도 비현실적이다. 두 기능의 장점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제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신들의 권력유지와 사적이익을 위해 시장기능을 비판하고 시장은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주장해야 하는 왜곡된 유인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시장기능을 비판할 때 과연 그들이 진정한 공익을 위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시장기능을 부정하면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5. 자본주의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념보다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자본이 노동을 착취한다는 흑백논리는 비현실적인 관찰이다. 착취, 즉 지배적 지위의 남용은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간에도, 노조와 비정규직간에도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현상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계층 간의 문제나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보다 보편적으로 착취적 행태, 즉 지배적 지위남용 행태를 일반적 규범으로 규제하고, 지배적 지위가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어느 시대나 이상주의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주의자들이 현실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결국 망가진 현실을 고치는 것은 과학에 기반을 둔 현실주의자들이었다. 한국사회의 미래비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경제체제와 제도의 논의에서 이념적 공리공론이나 비현실적 가정을 넘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시스템 디자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전화: (02) 320-1707

E-mail: jskim@hongik.ac.kr